



4월 정세분석 및 전망

● ● ● 농협법 개정안 주요 논의 동향 및 전망

가장 첨예한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농협법 개정안이다. 한농연에서는 농림수산물부내 농협 개혁위원회에 참여하여 ▲자산 규모 1,500억원 이상 상임이사 의무 도입, ▲농협중앙회장 간선제 전환 및 단임제 도입, ▲주요 사업 대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농협 개혁 법안들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요구사항들은 설문조사 및 업무연락 회람들의 방법 등을 통해 마련된 요구사항이고 이를 농협개혁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관철된 사안이다.

다만, 이번 요구사항이 현장 여론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일부 현장과 맞지 않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농민연합(한농연 참여)에서는 ▲상임이사 도입 요건 완화(1,500억원=>2,500억원), ▲축산경제대표 선출 특례 유지 등 일부 법안 내용 변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강력 반대하는 상황이고 한나라당에서도 소극적 찬성이기 때문에 표결 처리에 미온적이다. 단, 농민단체에서 단일 요구안을 마련했고 정부에서도 양보안을 마련하여 야당을 설득 중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다.

한미FTA 국회 비준 전망

다음은 한미FTA 국회 비준 여부다. 한미FTA 국회 비준은 피해 산업 대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협상 진행으로 협상 초기부터 국민의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오바마 정권 출범으로 미국에서는 재협상 요구를 공공연히 주장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미FTA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의 대안인 것처럼 비준만을 외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는 한미FTA 찬반으로 국론이 분열되었는데도 작년 12월 18일 여당에서는 기습적으로 한미FTA를 상정하여 국회 파행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 그래서인지 한미FTA 4월 임시국회 통과 여부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가 재보선을 앞두고 이해가 첨예한 법안에 대해 통과시킨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한나라당에서도 신중 비준론이 힘을 얻고 있고 야당에서는 피해 산업 대책 없는 국회 비준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상호금융대체자금 상환기간 연장 여부는?

농어업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2004년 지원된 상호금융자금 중 2조 1,035억원의 상환기일이 당장 오는 4월부터 도래한다. 이에, 농어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부채로 인한 농어가 파산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실제, 농가경제 악화로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2007년 말 농가부채는 가구당 2,995만원으로 전년대비 6.37%나 증가했다. 2008년 사료, 비료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경영비가 크게 상승했으나 상대적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은 정체 또는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소득이 악화되었다. <어가 경제 지표는 제외>

다행이 여론은 우호적이다. 상호금융 자금 상환 연기는 정부 및 여당 당정협약에서 합의를 하였고 야당에서도 적극 찬성 입장이어서 지난 3월 23일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 농식품위 전체회의 => 법사위 => 본 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매우 낙관적이다.